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18~3.31)

1 경제일반

1. 일본 정부 G20에서 개도국 투자 관련 국제원칙 채택 의욕 표명

□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담(6월, 오사카)에서 개도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원칙* 채택을 목표로 각국에 대해 일본이 중시하는 인프라투자 수준에 부합하는 협력을 추진할 것을 각국에 촉구할 방침임.

*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가칭)

○ 구체적으로는 타국의 투자를 배제하지 않는 ‘개방성’ 및 투자 대상국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투명성’ 확보, 개도국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채무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최초 명기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질 높은 인프라투자’가 고용창출 및 자금조달로 이어지는 점을 강조할 예정임.

□ 동 방침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항만 및 철도 개발정비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고 분석됨.

○ 투자 상대국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과도한 융자로 인해 채무 불이행에 처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G20에서 국제원칙을 수립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과잉투자*에 일정 수준의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G20에서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을 명기, 인프라투자에 관한 국제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최초로, 2016.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이세시마 서밋)에서는 ‘질 높은 인프라투자 추진을 위한 G7 이세시마 원칙*’을 채택한 바 있으나 중국은 불참.

*G7 Ise-Shima Principles for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 동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가 정상선언에 담겼으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국제원칙수립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 아베 총리는 2018.10월 방중 당시 ‘일중 협력에는 인프라투자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규범에 맞는 인프라투자를 추진한다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간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

○ 금년초 개최된 G20 참여국 준비회의에서 눈에 띄는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향후 중국이 표현 변경을 요구하거나 원칙 채택에 이론을 제기하는 등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 불배제.

2. 일본 정부의 3월 월례경제보고 발표 관련 동향

※ 일본 정부의 월례경제보고는 경기판단의 배경이 되는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경기에 관한 더 정부 공식견해로 인식됨.

□ 일본 정부는 전체적인 경기판단에 대해 지난달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최근 수출 및 생산 일부가 다소 약해진 점도 보이나,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변경함. 경기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은 유지하면서도 최근 수출 및 생산의 하락세를 반영해 표현을 다소 하향 수정함.

○ 종합판단 하향 수정은 2016.3월 이래 3년만의 일임.

○ 월례경제보고는 정부가 다양한 통계 및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종합판단을 하향수정하여도 경기 후퇴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입장은 아닌 경우도 있음. 지난 16년 3월 경기판단을 수정시에도 경기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음.

□ 정부는 지난 1월, 2012.12월 시작한 경기회복이 전후최장기간을 갱신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경제학자들간에는 경기가 이미 후퇴국면에 진입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내각부 담당자는 “현재 데이터로서는 경기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 고 함.

□ 경기 종합판단을 하방 수정한 데에는 중국 경제 감속의 영향이 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및 불투명한 경제전망 등의 영향으로 투자 및 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아,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감소함.

○ 다만, 내각부는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8%에 지나지 않으며,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는 지속 증가중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고용 및 소득 환경이 양호하고 기업수익이 높은 점을 배경으로 “완만한 회복” 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함.

□ 개별 항목별로는 △생산은 호조세를 보이던 스마트폰 수요가 세계적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對中 수출용 생산용기계 및 전자부품 수주가 부진해 2개월 연속 판단을 하향조정, △개인소비는 가전 및 외식 증가 경향으로 ‘회복’ 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업의 왕성한 투자욕에 힘입어 ‘증가’ 로 판단함.

[3월 월례경제보고 주요 항목별 경기판단 (괄호는 전월대비 변화)]

항목	경기판단
총괄판단(↘)	최근 수출 및 생산 일부에 약세가 보이나, 완만히 회복중
전망(↘)	현재로서는 일부에 약세가 남아있기는 하나, 완만한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개인소비(→)	회복
설비투자(→)	증가
주택건설(→)	대체로 보합세
공공투자(→)	부진
수출(→)	최근 부진
수입(→)	대체로 보합세
생산(↘)	일부에 약함이 보이며, 대체로 보합세
기업수익(→)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하나, 개선은 담보상태
고용정세(→)	꾸준히 개선

□ 일본 정부가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금년 1월 동 보고에서 ‘전후 최장 경기회복기간 갱신 가능성’ 을 선언한 직후인 바, 이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보임.

○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과도하게 전달되면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악화해 소비 및 투자에 신중한 자세가 강해지고 이러한 점이 실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10월 실시 예정인 소비세율 인상 연기론이 나오기 쉽다는 경계심도 금번 경기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일본은행 내에서도 “정부가 경기후퇴 판단을 보이면 증세 연기로 연결될 수 있다” 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3. 일본경제연구센터, 후쿠시마 사고처리비용 추산결과 발표

□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 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처리비용 추산결과를 발표(3.7), 동 원전 처리비용 총액이 최소 35조엔에서 최대 81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 이는 경제산업성이 2016년 공표한 22조엔을 상회하는 수치임.

○ 동 센터는 연료잔해 및 오염수 처리 방법에 따른 3가지 비용안을 작성, 구체적 항목별로는 폐로 및 오염수 처리에 최대 51조엔, 배상 약 10조엔, 오염제거에 20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동 센터는 2017년 처리비용을 50~70조엔으로 추산한 바 있으나, 오염수대책 등을 반영해 재추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처리비용 추산]

(※ 합계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일본경제연구센터(2019)				경산성(2016)	
연료 잔해	제거	제거	미제거, 매립	제거	
오염수 처리	완전정화, 해양방출 없음	트리튬수 희석 후 해양방출	트리튬수 희석 후 해양방출	검토중	
폐로·오염수처리	51조엔	11조엔	4.3조엔	8조엔	
배 상	10조엔	10.3조엔	10.3조엔	8조엔	
오염 제거	20조엔	20조엔	20조엔	6조엔	
합 계	81조엔	41조엔	35조엔	22조엔	

○ 오염수 내 모든 방사성물질 제거가 가능하고, 오염수를 환경으로 방출하지 않는 경우 81조엔으로 가장 높은 비용이 예상되며, 방사성 물질 정화 작업 후 트리튬수(水)를 희석해 해양 방출하는 경우 41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현재 제1원전에 저장된 오염수는 다핵종저거설비(ALPS)를 이용해 방사성물질 정화처리를 실시중이나 트리튬 제거가 불가해 ‘완전정화’가 곤란

4. 日 경산성, 원전사업자 보조제도 신설 검토

□ 일본 경산성이 원전사업자에 대한 보조제도 신설을 검토중.

○ 동 제도는 직접보조금이 아닌 원전사업자가 전력소매사업자에게 전기를 팔 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전사업자의 수익 확대를 도와 사실상 이를 원전 보조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도 도입을 목표로 함.

○ 경산성은 뉴욕주의 ‘제로 에미션 크레딧(ZEC)’을 참고하여 원전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에미션 원전’으로 자리매김하고 환경 기여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목표.

- 또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비가 급증해 원전 전기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된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을 ‘기간(baseload) 전원(電源)’으로 규정하고 2018년도 전원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0년 시점 20~2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만큼 제도 신설을 통해 원전의 경쟁력을 유지코자 함.

○ 다만 동 제도 도입은 사실상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 증가로 직결될 우려가 있으며, ‘원전 전기는 저렴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기존 설명과도 모순되는 바,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 일본 정부는 2018년도부터 전력소매사업자에 대해 전기 판매량의 44%를 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비(非)화석 에너지원’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바, 제도 도입 후 원전의 전기가 다소 비싸지더라도 일정 정도는 구입이 불가피함.

5. 일본 정유사,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우려 고조

□ 미국이 2018.11월 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에 대한 일본 정유사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이란은 일본의 6위 원유 공급국(원유수입량의 약 5%를 차지, 2017)

○ 미국의 제재 복원에 앞서 일본 정유사들은 작년 가을 이란산 원유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나, 미국이 11월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제재조치 예외를 인정한 바, 2019.1월부터 수입을 재개함.

- 그러나, 미국의 제재조치 적용 기간은 최장 180일로 5월 초 시한이 마감되는 바, 日 석유연맹이 기간연장을 요청하여 일미 양국 정부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기한 연장 가능성은 불투명

※ 석유연맹 쓰키오카 다카시, ‘미국의 예외조치 연장 승인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각사는 (4월에) 석유를 심기 어려울 것’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2019년 2월 무역통계(속보지)

1. 총액

○ 3.18 재무성이 발표한 2019.2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3,390억 엔 흑자로, 5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함.

- 수출액은 자동차 및 철강제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하여 6조 3,843억 엔을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원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7% 감소한 6조 453억 엔을 기록함.

- 5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주요 요인은 對中 수출의 증가로, 지난 1월 춘절(구정) 휴가 및 미중무역마찰로 인한 중국경제 둔화로 인해 對중국 수출이 부진(전년동월대비 ▲17.4% 감소)하였으나, 2월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수출이 증가함.

- 다만, 1~2월 실적을 합산해도 전년동기대비 6.3% 수출이 감소한 점을 들어, 춘절 이후에도 경기 감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2019.2월 무역수지]

수출	금 액	6조 3,843억 엔	▲1.2%	3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2.2	▲0.6%	4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453억 엔	▲6.7%	2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5.0	▲6.5%	2개월 만에 감소
무역수지	금 액	3,390억 엔	-	5개월 만에 흑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 지역별

(미국)

- 반도체 등 제조장치(+54.2%) 및 원동기(+19.7%)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항공기류(+249.8%), 액화천연가스(+90.2%), 음향영상기기(+64.0%)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6,249억 엔 흑자(2개월 만에 감소)

[對미국]

수 출	1조 3,030억 엔	+2.0%	5개월 연속 증가
수 입	6,781억 엔	+4.9%	8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6,249억 엔	▲0.9%	2개월 만에 감소

(중국)

- 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19.5%) 및 자동차 부분품(▲13.3%) 등이 감소한 반면, 반도체 등 제조장치(+22.6%) 및 자동차(+17.3%)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의류·동 부속품(▲23.3%)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312억 엔 적자(11개월 연속 적자)

[對중국]

수 출	1조 1,397억 엔	+5.5%	3개월 만에 증가
수 입	1조 2,709억 엔	▲15.8%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1,312억 엔	▲69.5%	11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 철강(▲14.3%)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0.9%) 등 수출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석유제품(▲39.6%), 의류·동 부속품(▲14.3%), 비철금속광(▲63.0%)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940억 엔 흑자(2개월 만에 흑자)
- 對아시아 수출은 일본에서 수출된 부품 등이 가공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은 바, 수출액 감소는 중국의 경기 감속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對아시아]

수 출	3조 3,141억 엔	▲1.8%	4개월 연속 감소
수 입	2조 8,201억 엔	▲10.6%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4,940억 엔	+125.9%	2개월 만에 흑자

(EU)

- 수출은 자동차(+5.1%), 선박(+80.7%), 반도체 등 제조장치(+65.9%) 등이 증가한 반면 이륜차자동차(▲22.3%)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자동차(+17.2%), 유기화합물(+25.7%), 육류(+52.2%) 등의 수입이 증가해 2월 수입액으로는 1위를 기록함. 무역수지는 582억 엔 흑자(2개월 만에 흑자)
- 2.1 발효된 일-EU EPA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으며, 덴마크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 등으로 육류 수입이 크게 증가함.

[對EU]

수 출	8,004억 엔	+2.5%	2개월 만에 증가
수 입	7,421억 엔	+0.5%	2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582억 엔	+36.9%	2개월 만에 흑자

7. 2019년 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기관찰조사는 상점주인, 택시 운전자 등 실제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관찰 가능한 경제 주체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2월 응답자는 1,832명으로 89.4% 응답률)
→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7.5로 집계, 전월대비 1.9p 상승
 -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가계동향(2.5p 상승)· 기업동향(0.3p 상승)· 고용(0.8p 상승)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
 -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한 48.9를 기록
 - 경기판단지수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봄 의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며 3개월 만에 개선된 반면, 선행판단지수는 2개월 만에 악화되었으며 식품 등 가격 인상으로 절약 성향이 강해질 우려가 있음.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 하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개원(改元·연호 변경) 및 황금연휴 등에 대한 기대감이 관찰된다’ 고 함.

3 대외경제 동향

8. 美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발동 1년 경과 관련 동향

- 미국 정부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 부과 관련, 일본산 제품 거래처가 요청한 관세적용 예외신청 대해 알루미늄은 신청건수의 80%가 승인을 받은 반면, 철강은 그 수준이 40%에 그침.
 - ※ 미국은 2018.3.25.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을 발동하여 각각 25%, 10%의 추가관세를 부과
 - 일본산 철강은 철도용 레일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고급제품이 대부분으로 대미 수출량은 연간 조강생산량의 약 2%로 적어 당초 일본 철강업계에서는 낙관론이 우세했으나, 추가관세 발동 1년이 경과한 현재도 철강제품의 60%에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또한, 일본 철강업체는 고급강재를 미국에 수출하여 미국 업체와의 합병공장에서 제품 가공을 거쳐 자동차 및 부품업체에 공급해왔으나,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영향으로 미국 업체가 고급제품 생산으로 태세를 전환할 경우, 일본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트럼프 정부의 추가관세 발동을 계기로 기초소재인 알루미늄 지금(地金) 수입이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급감,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이 전반적으로 꺾박해진 가운데 日 고베제강과 UACJ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현지 증산을 각각 결정함.
 - △고베제강소는 2020년 전반까지 켄터키주 공장에 약 50억엔을 투자해 범퍼 등 자동차부품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자재의 생산능력을 500톤/월→1,000톤/월 로 늘릴 계획, △UACJ*는 켄터키주 공장에 180억엔을 투자해 중간소재 증산체제를 정비하고 차체용 알루미늄 강판 생산을 통한 미국 재진출을 노림.
 - * UACJ는 2020년 차체용 알루미늄 강판 생산량이 2017년의 약 1.5배인 1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 일본산 알루미늄의 80%가 추가관세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바, 대부분의 제품이 관세적용 영향을 받지 않으나, 양사는 운송비 등을 고려해 현지생산 확대에 나섬.

9.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축소 관련 동향

- 1. 일본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아래는 3.28 日 재무성 발표 2월 품목별 무역통계(속보치)
 - (돼지고기) 일본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4% 감소한 반면, 유럽산*은 54% 증가, CPTPP 참여국인 캐나다 및 멕시코산도 각각 20% 가까이 증가함.
 - * 덴마크산 약 70%, 스페인산 약 40% 증가
 -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한 이유는 일-EU EPA 발효(2019.2.1)로 고급부위에 부과되던 4.3%의 관세가 2.2%로 인하되었기 때문임.

- 일-EU EPA 발효 전후의 돼지고기 수입국별 일본시장 점유율은 △EU가 2018년 평균 35%에서 협정 발효 후인 2월 44%로 급증하였고, △미국은 28%에서 23%로 하락함.
- **(쇠고기)** 미국산 수입은 17%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캐나다산이 3.6배, 뉴질랜드산이 63% 증가하였으며, 이는 CPTPP 발효(2018.12.30)로 쇠고기 관세율이 38.5%→27.5% 인하된 영향이 큼.
- 2018년 41%였던 미국산 쇠고기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CPTPP 발효 후인 2019.1-2월 39%로 하락, 2005.12월 수입 재개 이후 이어져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림.
- ※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BSE(소해면상뇌증)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2005.12월 재개된 바 있음.
- **(와인·치즈)** 일-EU EPA 발효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유럽산 와인은 스페인 및 이탈리아산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치즈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산 수입이 늘면서 30% 증가함.
-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의 對EU 수출(중고차 제외)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2. 일본 농업계 반응 및 분석

- 2019.2월 일본의 유럽산 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본 축산농가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EU EP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를 의식하여 수입업자들이 협정 발효 이전 수입을 자제했던 데 대한 반동으로 2월 수입이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관세인하 및 철폐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 ※ 일본의 2019.1월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50% 감소, 치즈는 6% 감소, 와인은 41% 감소

3. 일미 경제통상관계에 미칠 영향

- 일본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일-EU EPA 등) 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렀으며, 미국산에서 유럽산으로 수입처가 이동한 점을 볼 때, 일본 정부의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함.

- 다만, 트럼프 정부가 자유무역 진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일본의 미국산 제품 수입 축소에 대한 미국 국내 생산자의 불만이 미국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은 이르면 4월 개시될 일미 무역협정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캐나다 및 뉴질랜드산 등 냉동쇠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나, CPTPP 가입국은 WTO 규범이 아닌 독자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의 주요 피해국은 미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임.
- ※ CPTPP 가입국은 2019.1-3월 간 수입량이 14만 7,500톤을 초과시 세이프가드 발동 / WTO 규범이 적용되는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바누아투공화국 등이나, 미국 이외 국가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0.1% 미만에 불과
- ※ 美 식육수출연합회는 CPTPP 및 일-EU EPA 발효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출손실은 2023년까지 연간 5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